

월례토론회 지상중계

#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97년 대선

교육실

## 97년 제3차 월례토론회

일시 : 1997년 6월 18일 18:00~21:00

장소 : 병원노련 회의실

발표자 : 김수진 교수(이화여대 정치학)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노동자 정치세력화」

양경규 위원장(민주노총 정치위원장),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민주노총 대선방침」

참석자 : 40명(노조간부, 단체활동가, 연구단체 연구원, 학생)

# 주제발표 1.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노동자 정치세력화

김수진 교수 / 이화여대 정치학

## 들어가면서

오늘은 선진 각국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모습과 진보정당의 수립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치세력화 논의의 적절한 것이냐 하는 의문을 던져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절감하게 된 계기는 총파업 투쟁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정부가 1996년 초 노동법의 전향적인 개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은 한국의 전략적 산업 부문을 핵심 조직기반으로 하는 민주노총의 출범과 그 조직적 성장에 크게 연유했습니다. 즉, 노동운동 조직력의 신장이 국가로 하여금 그 동안의 배제적 노동정책으로부터 포섭적 노동정책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법 개정을 위한 검토과정에서 국가는 제도개혁의 방향을 애초의 '노동운동 포섭'이라는 전향적인 정책 목표에서 '대의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운동 억압'이라는 보수적, 퇴

영적 노선으로 급속히 선회해버렸습니다.

노동법 개정작업이 결국 '개악' (改惡)으로 치닫게 되자 민주적 노동운동의 투쟁 방향은 오히려 명료해졌고, 그것은 한국노동운동 사상 최초로 정상조직(peak organization)의 지휘와 지도에 의한 총파업 투쟁의 전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대결과 투쟁을 통해 노동운동이 획득한 성과는 단순히 몇 가지 제한적인 제도개혁을 쟁취해 내었다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한국 노동운동의 조직력이 이 투쟁을 통해 더 한층 강화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노동대중 스스로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국가, 자본, 노동간의 대립과 그 파국은 선진국에서 정치적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된 배경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 노동자 정당조직의 계기

잘 알려진 바대로 선진산업국가의 조직적 노동운동은 정치와 노동시장의 양 영역에서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자본의 억

압과 착취에 대한 저항은 비단 노동현장에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집단적인 투쟁 뿐만 아니라, 노동조직과 노동운동의 법률적 정당성 확보와 노동환경과 노동자 복지의 법률 제도적 보호 등 사회경제체제의 전향적인 개혁을 위한 정치적 투쟁의 필요성이 조직적 노동운동의 초기 단계부터 절실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유럽의 초기 노동운동은 전반적으로 부르주아 혹은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 하에 놓여 있었으며, 노동자들이 이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치조직을 모색하는 것은 대체로 부르주아의 개혁역량 혹은 개혁의지의 한계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현상이었습니다.

19세기 유럽 각국의 노동운동의 정치적 조직화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노동운동 중 정치적 조직화에서 가장 앞선 독일의 정치적 노동운동의 태동과정은 진보적 부르주아가 조직했던 노동자교육조직에서 성장한 노동자들이 독자적 조직화를 모색한데서 출발합니다. 1863년 라이프찌히에서 결성된 독일 최초의 정치적 노동운동 조직인 독일노동자총연맹(ADAV)은 이 지역 노동자교육연맹의 주도로 조직되었으며, 그것은 이 교육연맹을 후원하던 자유주의 세력과 노동자들과의 불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의 한계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각이 정치조직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노동자 정당이 조직된 역사적 배경은 한국의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북부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독자적 정치조직화는 집권 자유주의 세력의 노동억압정책을 노동자들의 후견자 역할을 자임하던 진보적 민주세력이 효과적으로 저지해 주지 못한 데 대한 실망에서 비롯됩니다. 노동자들을 특히 실망시켰던 것은 1878년 자유주의 정부의 임명에 의해 발족되어 사관계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 프란체스코 보나시 조사위원회가 노동자들의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의 합법화를 정식으로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주아들이 장악하고 있던 의회가 이를 즉각 거부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82년 단행되었던 선거권 확대 조치는 당시 패배했던 노동자들의 불만을 독자적 정치조직화의 모색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진보적 민주세력의 정치적 동맹체로서 활동 중이던 롬바르디아 노동자동맹 소속의 급진적 노동자들은 오로지 노동자들로만 구성되며 노동자들의 직접적 이익만을 대변하는 독립적 노동자 정당인 이탈리아 노동당(POI)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POI는 부르주아 정치세력들을 노동세력에 불화와 분열을 조성하여 노동자들을 영구히 특권계급의 노예로 머물게 하려는 의도 이외에 어떤 선의도 지니지 않은 적대세력으로 간주하고, 당원의 자격을 육체노동자로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이들이 표방했던 노동자주의(operaismo)는 무엇보다 중산층이 주도하는 정치, 그리고 부르주아의 노동운동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명백한 거부를 뜻했습니다.



만약 노동자 정당이  
정치권력의 획득을 지향한다면  
노동자 독자노선으로 이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 이외의 사회세력 혹은  
계급과의 정치적 연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이 가장 앞섰던 영국에서 정치적 노동운동의 성장이 가장 지연되었던 것은 19세기 중·후반 자유, 보수 양대 부르주아 정당이 경쟁적으로 단행했던 정치, 경제, 사회적 개혁입법에 크게 연유했습니다. 이 시기 부르주아 정당들의 자발적 개혁은 영국 노동운동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정치활동보다는 부르주아와의 돈독한 정치적 유대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인 개혁을 선호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반면, 노동운동 일각에서 추진되었던 독자적 정당 결성 운동은 19세기 말엽의 경기침체와 영국 경제력의 상대적 쇠퇴, 그리고 그에 따른 영국 정치경제의 전반적인 보수화 추세를 배경으로 하여 마침내 1893년 독립 노동당의 결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독자노선이 노동운동 전반, 특히 영국 노총(TUC)의 공식적인 지지와 연대를 획득하게 된 것은 20세기 초 노동운동에 대한 부르주아의 적대감이 보다 노골화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1901년 태

프 베일(Taff Vale) 판결은 바로 부르주아적 개혁의 한계와 독자적인 정치조직의 필요성을 영국 노동운동에 폭넓게 인식시켜 준 계기가 되었으며, TUC를 모체로 한 영국 노동당 출범의 기폭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노동자 정당 결성과 관련한 서구의 경험과 사례를 볼 때 현재 보수독점적 정치구도하에서 부르주아 정당들의 개혁의 한계를 뚜렷이 목도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정치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조직방식에 관해 진지한 모색을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발전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자 정당의 성장, 전략, 이념의 시사점

민주개방 이후에도 보수독점의 정치적 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옹호해 줄 어떠한 정치세력도 정치사회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재 한국의 정치지형입니다.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보여 주었던 기성 정치권 전반의 태도야말로 부르주아 정치세력의 한계를 극명하게 노정 시켰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국 노동운동이 노동시장에서의 조직력 강화와 발을 맞추어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모색할 한국 노동운동은 어떻게 방향과 좌표를 수립하여 정당 조직 건설로 나아가야 합니까? 서구자본주의 국가의 경험을 분석하여 보면 노동자 정당의 성장, 전략, 이념의 시사점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자 정당의 성장

20세기가 시작될 무렵이면 노동자들의 배타적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이 서구의 모든 국가에 이미 조직됩니다. 이들 정당에 각국의 노동계급이 결속해 가는 속도와 방식은 국가 별로 비교적 큰 편차를 보여 주었지만, 1차세계대전 이전까지의 결속의 속도는 대체로 완만한 편이었습니다.

선진국 노동자들의 정치적 동원화 과정을 조망해 볼 때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원론적인 사실은 노동자 정당의 출현 자체가 노동자들의 즉각적이며 대폭적인 지지를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노동자 정당 스스로의 적극적인 동원화 노력; 노동시장에서 노동조합의 조직적 성장 및 정당과의 긴밀한 협력 수준; 부르주아 정당, 국가, 자본가들의 조직적

노동운동에 대한 태도 및 대응방식; 종교, 언어, 지역 등 노동세력의 결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경제적 균열요인들의 존재 여부 및 정치적 비중 등 다양한 요인들이 정치적 노동운동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자 정당의 정치적 성장은 정치제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유럽 대륙 대부분의 노동자 정당이 정치적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비례대표제입니다. 덧붙여 선진민주국가들 중 대통령제를 지속적으로 채택한 유일한 국가인 미국에 노동자 정당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유에 관해서도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도 및 권력구조와 관련한 이와 같은 성찰은 노동자 정당의 정치적 성장 전략의 가장 기초적인 영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노동자 정당의 전략

가령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자 정당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계급구조 내에서 노동자 정당은 노동자들의 정치적 지지만으로 절대다수의 지지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발전의 어떤 단계에서도 노동자가 전체 노동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Karl Marx는 19세기 후반 유럽사회의 계급 분석을 통해 '한줌의 부르주아와 절대다수의 노동자'로 자본주의 사회를 설명했지만 이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조업 노동자의 수는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

입니다.

따라서 만약 노동자 정당이 정당활동의 보편적 목표를 쫓아 정치권력의 획득을 지향한다면 노동자 독자노선으로 이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 이외의 사회세력 혹은 계급과의 정치적 연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사회세력을 제휴세력으로 설정할 것이며 또 이와 같은 제휴와 연대를 위한 정책적 이니셔티브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 노동자 정당의 이념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각에 입각한 독자적 정치운동이 지속적인 정당조직체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정치활동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이념적 기초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 이념적 조류의 다양성과 이론적 풍요로움이 거의 절정에 이르렀던 19세기 후반 유럽의 사회주의 사상들은 독자적 정치운동의 이념적 기초에 대한 노동운동의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진보적 자유주의의 정치적 후견으로부터 독립해서 독자적 정치노선을 모색하려고 노동운동에게 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항 이념이었던 사회주의가 발산하는 매력은 특히 강력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홀로 서기를 추구했던 노동운동이 특정 사회주의 세력과 필요에 의한 연대를 맺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이와 같

은 결합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보편적 현상이었지만 이들 국가의 모든 정치적 노동운동은 혁명에 의해서든 아니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든 사회주의 체제의 확립에는 하나같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차대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어떤 사회주의 정당도 국유화 및 계획경제의 도입이라는 정통 사회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했으며, 오늘날 이 정책을 표방하는 서구의 사회주의 정당은 찾아 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정통 사회주의 노선의 근본적인 한계에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정통 사회주의 노선은 정치적 노동운동의 성장을 위해 질실히 필요한 계급연합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노동계급의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시키지도 못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구의 노동자 정당들은 2차세계대전을 전후해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정통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해 갔던 것입니다.

####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이념적 좌표

그렇다면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모색할 한국 노동운동이 설정해야 할 이념적 좌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립입니다. 구체적으로, 민주주의의 외연을 정치적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나아가 경제적 영역으로 확대시키려는 것을 정치활동의 목표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한국 노동운동은 이에 근거해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지니는 정치적, 경제적

한계를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노동자 및 잠재적 계층세력의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여야 합니다.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립을 정치적 영역, 사회적 영역, 경제적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봅시다.

첫째, 정치적 민주주의의 완전한 확립을 위한 목표입니다.

노동운동을 위시해서 진보적 정치세력이 정치사회 내에 진입하여 세력을 확장시키는 데 용이한 방향으로 정치제도 개혁 운동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이는 권력구조, 선거제도, 정당제도, 노동법 등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독자적이며 진보적인 대안을 확립하는 문제와 결합됩니다.

최근 한보사태이후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하자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운동과 진보적인 정치세력의 관점에서 유리한 권력구조, 선거제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현행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진보적인 정치세력의 정치적 진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제는 '승자독식의 정치구조'이며 진보적인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저 자신 한국정치학회 내에서 몇 안되는 '내각책임제' 주창자입니다. 물론 이 때문에 김종필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정치권력 장악의 목표가 있다면 바람직한 권력구조는 내각제입니

다. 또한 현재의 소선거제를 빠른 시일 내에 비례대표제로 바꾸어 내야 합니다. 정치제도의 변화는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를 가속화 할 것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 시민사회 내의 진보적 개혁세력과의 연대와 제휴는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한 목표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시민권의 확립을 지향합니다. 즉, 보편적 복지국가의 이념에 입각한 포괄적 사회보장제도를 시혜가 아닌 '시민적 권리'로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의 문제, 아픈 사람이 돈 걱정 없이 치료받는 사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권리 등이 사회적인 민주주의의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만의 복지가 아닌 포괄적,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및 소득재분배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사회적 시민권 확립을 뜻합니다.

셋째, 경제적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한 목표입니다.

정치적 영역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경제적 과두지배와 공존하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모순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과 정치엘리트와의 정경유착에 의한 비민주적 지배구조의 청산을 경제민주주의 확립의 일차적 목표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한국 경제의 최대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는 독점자본의 소유 집중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강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의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우리 나라 헌법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이를 삶의 현장에서 느끼지 못합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삶의 현장인 직장에서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것은 노동 현장에서의 민주주의 원칙의 관철을 의미하며 산업민주주의의 실제적인 구현을 뜻합니다.

### 질의응답 및 토론

**질문** 노동자 정당의 이념으로 사회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로 생각되는 '민주주의의 확립'을 주장하였는데?

**답변** 사회주의를 목표로 했던 서구의 모든 정치적 노동운동은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확립에 실패하였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또한 정통 사회주의 노선은 정치적 노동운동의 성장에 절실히 필요한 계급연합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노동자 자신의 지지도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19세기 중엽의 노동자와는 달리 아무 것도 없는 존재가 아니라 잃어버릴 무언가를 가진 존재이며 보편계급으로서의 위치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사회주의의 기본 원리인 국유화와 계획경제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한국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 단계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늦어진 원인은?

**답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연구하지 못해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정부와 자본의 탄압, 한국의 분단(반공이데올로기)등 외적인 변수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탄압은 어느 나라에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정치세력화를 이루어 낼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물론 선진국과 제3세계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경로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보다는 앞으로 정치세력화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질문** 내각책임제를 주장하셨는데?

**답변** 우선 우리나라의 진보세력이 왜 내각제를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각제 반대의 근거는 재벌위주의 금권 정치가 내각제를 통해 완성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특히 일본의 내각제 정치구조가 보여주는 금권정치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는 정경유착과 재벌의 금권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대통령제는 '승자독식의 정치구조'이고 진보세력이 정치적 교두보를 만들어 가는 데는 대단히 불리한 제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내각제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진보세력의 정치적 진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 주제발표 2.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민주노총의 대선 방침

양경규 /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민**주노총은 6월 19일 중앙위원회와 7월말에 있을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97년 대통령 선거 방침”을 확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직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제기되고 토론된 내용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민주노총은 조직 건설 과정에서 기본적인 정치방침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98년 지자제 선거에 대거 진출하여 독자적인 정치 영역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1998~99년 정당을 건설하고 2000년 국회 원내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노총은 정치세력화의 의미와 방향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정치세력화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정치조직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집권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치세력화에 대한 이같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목표와 방향, 경로는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상태이며 생각의 차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 정치세력화의 필요성

우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의 필요성부터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 현장의 노동운동 탄압, 개악된 노동법의 분쇄와 개정이라는 당면한 노동운동의 요구로부터 제기됩니다. 노동법 개악이후 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포섭·억제·지배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총노동과 총자본의 문제입니다. 노동법 개정이후 현장에 불어 닥치고 있는 탄압에 대한 대응은 현실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소위 신보수주의로 규정되는 보수화라는 국내외적인 흐름 속에서 노동운동의 대안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보수주의는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기업의 민영화, 국가의 간섭 축소라는 이름아래 사회복지의 축소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이데올로



그간의 정치조직 건설의 모습을 보면 합의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습니다. 민중당, 민중의 당, 한국노동당 등 그간의 모습은 실패가 예견된 정당활동이었습니다. 노동자의 정당을 주장하면서도 노동대중 스스로가 참여하지 않은 정당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 하에 전세계적인 공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중운동의 흐름만으로는 안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운동의 활로가 있는가 제기해 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우리운동은 87년 이후 승리와 패배의 과정을 통해 성장해 왔지만 다른 면에서는 87년 이후 계속 자본의 공세에 밀려 위기의 상황까지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치세력화의 과제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실천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는 것입니다.

셋째, 이번 총파업투쟁을 통한 노동대중의 자각과 자신감 확보입니다. 이번 투쟁을 통해서 민주노총은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김영삼과 신한국당 정권을 처음으로 무릎 꿇게 하였으며 국민 속에 확실히 뿌리 내렸습니다. 총파업과 노동법 개정을 거치면서 노동자들은 기존 보수정당의 실체를 똑똑히 인식하였습니다. 어느 정당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은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각과 우리가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야 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넷째, 당면 정치일정의 문제입니다. 97년 대선 이후의 한국 정치의 지형 변화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대선 이후의 98년 지자체 선거, 2000년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민주노총이 이러한 정치 지형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듯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은 노동운동의 본성적인 요구와 함께, 앞에 제기된 이유에서 당면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은 더 이상 강조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정치세력화의 방도

문제는 어떻게 정치세력화를 이루어 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대중적인 합의의 과정입니다. 물론 합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정치조직 건설의 모습을 보면 합의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습니다. 민중당, 민중의 당, 한국노동당 등 그간의 모습은 실패가 예견된 정당 활동이었습니다. 노동자의 정당을 주장하면서도 노동대중 스스로가 참여하지 않은 정당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87년이후 우리 운동은 대선 방침, 진보정당 건설의 과정에 합의와 단결의 기운을 높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최근 극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국연합도 6월 14일 정치방침을 조직적으로 결의하였고 민주노총도 노력을 하면 대중적인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위원장으로서는 저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대단히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따라서 언뜻 가장 현안인 것처럼 부각되고 있는 대선 논의는 수위 조절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방침의 결정과 관련 사업은 정치세력화라는 장기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상에 있는 전술적 지점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노동자의 계급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자들만이 아닌 전체 국민들의 지지와 지원

이 필수적입니다. 계급성을 견지한다는 것이 노동자들만의 배타적 이익의 실현이 아닌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관점 확립과 폭넓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넷째, 대중조직과 정치조직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일상적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조합과 집권을 목표로 활동하는 정당은 그 위상과 활동원리가 다릅니다. 노동조합과 정당은 독립적이면서 상호 협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민주노총은 정치세력화의 중심이지만 진보정당 건설 사업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소박하고 겸손한 태도입니다. 방침을 결정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함에 있어 민주노총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즉 민주노총의 방침이 전부인가 부분인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사업 또한 이러한 관점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장기적인 방침이든 대선 방침이든 민주노총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단위일 수는 있으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변혁을 지향하는 전국연합,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양심적 지식인 등 다양한 세력이 정치세력화의 주인인 것입니다.

여섯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입니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토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토론과 함께 정치세력화의 인적 물적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누가 이 정당 건설을 주도할 것입니까? 민주노총의 50만 조합원들입니다. 특히 간부들부터

출선수범하여 정치조직 건설에 나서야 합니다.

일곱째, 당면한 입단투 과정에서 투쟁전선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노동대중이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정치 방침을 확정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총파업 이후 현장에 침투하고 있는 자본의 공세에 대한 대립전선을 분명히 하고 투쟁을 통해 돌파하여야 합니다. 이는 97년 입단협 투쟁과정에서 우리 전체가 고민하고 해결하여야 문제입니다.

### 정치세력화 방도와 대선방침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논의되고 있는 세부적인 정치세력화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정당과의 정치연합 방안과 독자적인 정치조직 건설 방안입니다. 현 정치상황과 노동법 개정투쟁의 과정을 볼 때 한국의 어떤 기성 정당도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선 문제를 생각할 때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97년 대선 방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론(論)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현실을 중시하는 '신중론'과 '참여론'으로 나뉘고 참여론은 다시 '우리 후보'를 내는 방안과 기존 정당과의 '정책연합'을 통한 참여로 나뉘니다. 먼저 각 입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을 중시하는 신중론은 첫째 민주노총의 조직 여건 상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

하며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 둘째 87년이후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운동 내부에 기업별 의식이 잔존해 있으며 제대로 된 정치교육을 조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 셋째 한국정치의 과당성과 지역구도는 우리 노동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바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92년 백기완 후보가 얻었던 표가 얼마나 되었는가라는 것을 냉정히 보아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이 결성된 지 만 2년도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선 방침을 확정하게 되면 조직의 분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반면 참여론은 정치세력화의 방안과 대선 방침 수립에 있어 조건과 환경은 부족하지만 조직적 결의와 준비로 돌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중론에 대해서는 대선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98년 지자체 선거부터 적극 대응하지는 논리는 사실 정치활동을 몇 년 후로 미루자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대선을 통해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구축하지 못하면 내년 지자체 선거도 개인적인 실천 이상의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파업 투쟁을 통해 조합원의 정치적 자각과 자신감은 높아졌으며 이번 시기만큼 정치세력화의 좋은 기회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민운동이 그간 보여주었던 선거 시기의 분열은 필연적인 것은 아니며 전국연합에서 6월 14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정치방침을 확정하였듯이 민주노총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논의를 전개하면 우려하는

조직의 분열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현재 민주노총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세력화와 대선방침의 논의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위원장을 맡은 지 2주일도 안된 상태이며 사실 여러 조건상 정치위원장을 초기에는 고사하였습니다. 현장의 임단투 투쟁을 비롯한 연맹의 산적한 사업도 많은데 내가 이일을 꼭 맡아야 하나 고민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노련의 동지들이 결단을 내려 저에게 이 중책을 연맹의 일과 함께 병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면한 투쟁의 현장에서 우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응답 및 토론

**질문** 우선 민주노총은 대선 논의에 있어 선거 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발제 내용을 보면 큰 구상과 포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지만 '여의주 없는 용(籠)' 같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민주노총의 선거 강령에는 통일문제, 사회보장제도, 국가보안법 및 안기부법의 철폐, 미국 문제,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재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주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우선 제기하신 문제를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민주노총이 이러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구성

되는 정치조직 단위에서 논의하고 시급히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정치세력화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제시하는 발제문을 들으면 정세 판단이 수세적이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앞으로 민주노총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질문자의 의견과는 달리 저는 현 민주노조운동이 상당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은 6월 중순부터 조직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 조직 내부 논의의 활성화와 통일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또한 정치 방침 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조직내 분위기 확산을 위해 6월말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기초사업을 토대로 7월 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정치조직의 건설에 관한 민주노총 내부의 논의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민주노총 내부의 논의는 무슨 무슨 안들을 놓고 토론에 부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실천적인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층의 실천이 곧 민주노총의 방침을 결정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때문에 대중적인 '합의의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